제344회국회 (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22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자치부
   다. 고용노동부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 1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자치부
   다. 고용노동부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3
2.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 34
1. 업무보고(계속) ····· 34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자치부
   다. 고용노동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자치부

다. 고용노동부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고요,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천에서 열리는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이유로 차관들이 대신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니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제원 위원

님, 진선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여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불안과 주거·보육부담 등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혼·비혼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고 소득·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교육·공공·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확연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의지를 결집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형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경원 예.

○김학용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김학용 위원 아니, 이것도 양이 좀 많을 때 뭘 대신하는 거지 이것 몇 장이나 된다고, 그중에서도 앞에 현황 빼면 향후 추진방향 해 봐야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차관님이 그냥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것 양이 많아야지 이게 무슨 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4월에 출생아 수가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미래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둔화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 저축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총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KDI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OECD의 경우에도 한 2%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공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장기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미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98조 원을 투입하면서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정·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리체계도 합리화해 나겠습니다. 사회보험별로 재정전망주기를 통일하고 장기재정 안정화 목표 수립 등을 통해서 재정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도 확충해 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활용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다음에 또 외국인력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혼·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고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기회 창출대책을 지금 정부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보완을 하고 이행력을 높이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또 청년 구직자들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지금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원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인력의 활용 부분은 여성·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에 지금 M-Curve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퇴직 후 재취업·전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수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정주를 유도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민에 따른 사회갈등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이민정책의 방향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결국은 경제체질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구조개혁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특히 규제프리존 도입이라든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서 신규투자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 나가는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심기일전해서 적극 이 특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최상목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에는 오늘 업무보고 부분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출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장차관이 꼭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실무자들이 와서 '기재부는 여기의 주무부처가 아니다' '앞으로 1급이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가장 핵심은 기재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느냐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자부장관이 별도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업무를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으로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유용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현민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김석진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그간의 실적, 추진 정책,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 정보화교육기관 및 IT봉사단과 함께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공무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2쪽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입니다.

공직사회 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다자녀 양육자, 어린이집, 양로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했습니다.

3쪽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지자체가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저출산 정책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화대책으로 노인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였습니다.

4쪽 저출산대책입니다.

지자체 출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율 변동 원인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함께 분만 가능 병원의 위치 또 임산부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노인·보육 등 분산된 지자체 조직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심으로 통합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시도 저출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시도별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 공간 혁신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표를 확대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 정책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화대책입니다.

노인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복

지허브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복합민원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공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향 방문 봉사 등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기반 확충 대책입니다.

사회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노인·아동·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비 등 4대 항목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9쪽부터 12쪽까지 지역별 통계와 주요 대책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자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렬 행자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취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직 단계에서도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장년들도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일자리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입직·재직·퇴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장년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입직을 앞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3월 구성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사내 눈칫밥과 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산하여 정년 60세의 안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생애설계서비스 등 인생 이모작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장년의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21세기의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훈련 시스템도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몇 년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장년층의 노후생활 불안 등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 장년층 생애 고용 지원과 같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적 일자리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직 단계에서는 성장-고용의 연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지난 6월 현재 1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직 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육아휴직 후에 직장을 복귀하는 비율도 낮고 경력단절예방 효과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관행이나 경직적인 조직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퇴직 단계에서는 길어진 수명에도 불구하고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관행과 전직 준비 미흡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입직·재직·퇴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의 마련입니다.

노동시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청년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취업과 결혼을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력 및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청년 고용 친화적 노동시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청년의 직접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격차 해소 및 상생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의 강화입니다. 청년-일자리 간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범정부 채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입니다.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K-Move 스쿨을 취업성과가 높은 장기·고급훈련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온·오프라인의 정보 제공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매력도 제고 및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조기 입직과 중소기업의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강소·중견기

업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또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이번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에 2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중 인문계의 비중을 높이고 보다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어서는 워크넷에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청년이 취·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훈련의 취업성과 강화입니다.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기 개발된 NCS를 검증·보완해서 고시하고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추가 NCS를 개발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내실화입니다.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재학생 단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및 컨설팅 등 훈련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가정 양립 확산으로 출산·양육 친화 여건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4개의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모성보호가 취약한 병원 업종을 타깃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성·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법 해소를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유연근무 확산입니다. 관련해서는 유연·재택·원격근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재택·유연근무를 앞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재택근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난임휴가 도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사용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의 무급 난임치료 휴가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애 고용 생태계 조성으로 고령사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장년 근로자의 더 오래 일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1150개소를 선정하여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년층이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 인생 이모작을 경영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 대상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애경력 설계입니다. 장년 근로자 대상 생애

경력 진단, 진로설계 등을 지원하는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장년 유망·적합 직종 중심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상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년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조성도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장 클린사업과 안전한 일터 확산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입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입니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중장기 노동시장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업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국인 채용 시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하는 정부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미혁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1·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개발한 것을 취합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내용 속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상의 세부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1년 단위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단위의 구체적 시행계획이 매년 어떻게 수정되고 또 평가·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추가해서 본 위원회에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께서 이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저출산대책사업이 아니라 각 부처의 사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재원 확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저출산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한 1.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너무 적고 저출산대책예산 규모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저출산대책 지출은 대체로 GDP 대비 2% 중반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기재부차관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계획 책자를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 193쪽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이 딱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내지는 '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저출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1차관입니다.

먼저 모두에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복지부가 간사고요, 기재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재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1·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작은 규모, 한 2조 원에서 출발했는데 연평균 24% 정도 증가를 하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저희가 향후 5년간 총 109조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평균 한 6% 수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의 총지출 증가율이 한 2%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출도 한 4%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 저출산·고령화 예산 자체가 연평균 6%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나름대로는 그래도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은 제가 그 자료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원 그러니까 이 저출산·고령화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밖에 저희가 적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책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 확보도 정책도 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도 보면 지난달 여성의 생리대를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리대는 그냥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권 차원에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의 토론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입법이 아니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혹시 추경이나 2017년 정부 예산안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포함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하신 그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도 나름대로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정부·지자체·민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담기는 추경의 목적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좀 성격에 맞지 않아서 정부안에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 하고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역시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권미혁 위원 올해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 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자세히 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야,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대책은 저는 필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국가 성평등 목표 설정하고 성인지 예산사업을 좀 대폭 개선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법과 성인지 예산의 주무부처로서 단순히 성인지 예·결산을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효과적인 이행을 총괄하고 기획·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전면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과,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평등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질문하신 것

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결산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앞서 있는 편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에 불과하고요, 결산서도 작성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 내실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 점검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부각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기재부의 추후 보고는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란 말이지요. 다 인식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광수 위원 아이 낳기 어려운 것이지요? 보육·교육·주거 문제, 고용불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이 돼 버린 거란 말이지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액공제가 3자녀 우대정책이 기본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광수 위원 지금 2자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단순 재생산이지요. 둘이 부부 간에 모여서 자녀 둘 낳는 것인데, 이 기본만 확산이 돼도 유지가 된다는 말인데 세액공제의 기본을 2자녀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자녀 세액우대가 15만 원 그렇지요? 3자녀가 30만 원 그러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광수 위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광수 위원 이것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경제·사회적인 여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재정 부문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정, 특히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은……

○김광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녀 세액공제가 아니고 출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공제가 지금 현행 1명당 30만 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자녀, 그러니까 2자녀·3자녀일 경우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적어도 2자녀를 지금의 두 배 이상 30만 원으로, 3자녀를 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서 가장 큰…… 지금 많은 돈 들였잖아요? 거의 한 152조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효과가 없다는 말이지요.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경제적인 요인만은 아니다 그러는데 경제적인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생각의 변화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체조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고용노동부 말씀……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광수 위원 불임·난임 부부 어저께 제가 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지금 불임·난임 부부가 급증했어요. 이분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거잖아요?

지금 2014년 통계 난임 여성이 1000명당 161명, 남성이 49명,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우울·자살·죄책감·불안·두통 여러 가지 요인……

비용 문제도 문제고 정신적인 고통이 큰 문제인데 이것 법적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광수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래서 지금 연간 3일 정도의 난임휴가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치료받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불임·난임 여성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보장을 해 달라 그 말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김광수 위원 제도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비용 문제도 큰 문제인데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한두 시간 정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난임 관련된 휴가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3일 정도의 무급 난임치료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치료를 이유로 해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연간 3일간 무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자치부차관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김광수 위원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확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우선 사례 자체를 많이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표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상도 주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김광수 위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리가 합동평가할 때 우수사례가 있는 데는 상위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또 재정적 인센티브로 연결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기획재정부, 제가 얼마 전에 예결특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특회계 이런 데 쓸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특회계요?

○김광수 위원 우수사례 발굴해서, 지난번에 세종시나 해남이 아주 우수사례로 돼 있구먼요. 이런 데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지자체별로 실제로……

지특회계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제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지자체별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본

질의 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오늘 장관 세 분이 모두 불참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유를 봤더니 기획재정부장관님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두 장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를 보면요, 인천의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한 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나머지 차관님들이 가면 되는 건데 굳이 행정자치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두 분이 참석을 안 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세 분 차관님들이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언행이 불일치가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1차례 회의를 했는데 네 번은 열네 분의 정부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적절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오늘 장관들께서 참석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관들 참석하셨는데 돌아가서 장관들께서 앞으로 꼭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아까 기재부에 대해서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1급 정도가 참석하겠다라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왔을 때 과연 기재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금년으로 16주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연임해서 8년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의원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면 7년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임기가 10년이고 상무위원은 5년, 지도자 수업 받은 것을 포함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를 초월해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 계신 차관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차관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87체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학용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인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학용 위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켜 낸 국가 재정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4년에 가면 27.6%, 노년 부양비가 45.7%에 달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 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금년도에도 보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도의 1.08을 뛰어넘는 결과가 금년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분기만 보면 6000명 정도 신생아가 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저출산에만 80조를 쏟아부었다는데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재부차관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여건, 그러니까 경기순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의 재정 투입이나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반면에 저희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용 위원 차관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게라도 나타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늦게도 이것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내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원 시스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비가 사교육비 포함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3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을 젊은 부부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365일 저출산에 총대를 매고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아니,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다 오고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다 대참이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캥거루족 얘기 들어보셨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학용 위원 옛날 같으면 애들이 크면,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니까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먹고살아 가지고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요새는 대학교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고 5년, 6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야지요. 그러면 이십오륙세까지는 결국 부모가 애들 용돈 주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20세 넘으면 그나마 150만 원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 현재 안 해 주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학용 위원 아니, 돈도 벌지 않는 애들한테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것,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과세주의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 그것은 아마 성년이 됐을 경우에 해 가지고 성년이니까 그렇게 제도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것은 재정이나 세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고용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구조적인 원인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이나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번 특위 활동과 함께 다잡아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제 지원 부분은 세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23세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올 것까지 포함해서 25세까지 제가 봤을 때는 소득공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차관님이나 기재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간단하게 경제만의 문

제겠습니까? 정말 사회 복합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고 또 시대적인 조류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몇 % 이상은……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칸막이를 헐어서라도, 부처를 하나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부처, 정부조직을 재편해서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부서에 힘을 실어 가지고서 확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여러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투입했고 또 3차 기본계획에서 109조라는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면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자리는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국회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국회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를 말해 보면요.

저희들이 산아정책운동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라가 그것이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면 하여튼 온 사방에 도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TV, 여러 가지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홍보정책 이렇게 해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90년에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기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산아 문제,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교류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만들었다면 저출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법을 못 만든다고도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것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요, 기금이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 성립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출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출산은 지금 여기서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듯이 관계부처 여러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들과 기금의 성립요건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여튼 우리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또 특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3자녀, 다자녀 가정에는 정말 특별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가 있는 사람은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 프리패스 한다든지 철도요금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특위에 들어오고 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다자녀카드가 있으면, 3자녀 이상인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저는 그래서 3자녀 이상 다자녀를 가진 분들을 정말 영웅시하는, 그래서 TV에도 옛날에 '장수만세' 나온 것처럼 단란한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 주고 또 주위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한 끼 사 주고 술 사 주고 그것보다도 정말 자신을 알아줄 때, 만나서 '누구십니다' 알아주면 그 사람이 정말 기억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자녀를 가진 분들이 사실 애국자라고 볼 수 있고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대우를 해 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차관님한테……

하여튼 경력단절의 문제, 특히 여성의 경우에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사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사회, 회사의 경우가 한 40, 50% 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대책을 봤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듯한 또 가슴에 와 닿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교일 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최교일 위원 그리고 행자부차관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최교일 위원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이런 게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개별 가정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대우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가정이나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제원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고령화·저출산의 원인,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오늘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것은 꼭 저출산대책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방향인데 그 뒤에 인력 활용, 4쪽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의 하나 저출산대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인력을, 여성과 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 인력 보완하는 것,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해서 생기는 성장위기 또 이어서 그것이 가계소득의 감소로 해서 가계위기가 오고 또 그것이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어디에도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얼른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주거 지원이라든지 재정·세제 지원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를 보실까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2007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친 가계소득은 508조 원에서 718조 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40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51%, 그러니까 가계의 경우 소득 증가보다 세금 증가가 많지요.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185조 원, 2015년에 275조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2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그러니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소득의 증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세제가 적용된 이후에, 세후에 그것이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저축구성비를 보면 정말 엄청난 양극화현상이 발견됩니다. 92~93년 평균 법인의 국민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2014년 보면 무려 60%로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국민총저축의. 가계는 46%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출산 해소를 얘기한들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격화소양, 남의 다리 긁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구두 위로 다리 긁는 얘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장관님들이 한꺼번에 다 빠진 것에서부터 보이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한 자세 부족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고 내용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내용이라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 상황을, 정말로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만 세금부담을 더 짊어지는 그리고 상위 가계와 대기업에만 소득이 쌓이는, 그래서 정말로 가계는 아주 다층적인 격차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계소득과 자산의 부족이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학력격차로 연결되고 또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주거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고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끊어 줘야 됩니다.

저출산해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던데 주무부는 보건복지부일지 모르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경제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의 문제이고 나라가 지속 가능할지 못 할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정말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창과 방패 같은 말을 주고받을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법을 꼭 같이 찾아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제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오늘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처에서 자체 저출산·고령화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장차관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물론 오늘 이 특위 준비를 하느라고도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것은 저희 안에서 주요업무들을 챙기는

리스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1년에 정례적으로 한번 챙기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정기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부처에서는 잘 챙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챙기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3차 계획 들어갔지 않습니까? 1·2차 계획은 총투자에 대비해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실제 투자실적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재정이 1·2차의 경우, 죄송합니다마는 80조 원 정도……

○이명수 위원 3차만 나왔지요, 3차?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정확한……

○이명수 위원 거의 투자가 다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다 됐다고……

○이명수 위원 그러면 투자는 됐는데 실적은 좀 약한 거네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 3차의 경우에, 지금 수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어젠다나 이걸로 직접 부처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아까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기재부가 정말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의자와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보고 내용 봐 가지고는 오늘 특위 열리니까 그냥 정리해 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이 통계도 안 맞아요, 복지부 통계하고. 노인빈곤율도 안 맞고 수치가 안 맞는 게 몇 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업무를 제대로 한번 잘 챙겨 주십시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재정 투자하고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자녀 우대한다는 얘기를 당·정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력이 함께 모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어느 특정한 부처나 특정한 부서의 생각이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법 강화하고요, 이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세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차 전체 종합계획을 보고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본 분위기는, 여기는 요약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발전을 시키고, 3차 계획이 이제 시작됐는데 미시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더 찾아서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저대로 고민을 해 보는데 기재부 자체 내에서 3차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1·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성의 이슈가 제기돼서 3차부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출산 핵심 과제에 대해서 매년 심층평가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심층평가 결과도 보완을 해 가지고 3차 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 오늘 나오셨는데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도 행자부가 주무부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행자부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화다 지방세 감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사실상 주무부는 보건복지부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나서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팀을 따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전담하는 인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 업무를 하는 가운데에는 이것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시·군·구에 이런 전담팀을 운영

하는 데가 있더구먼요, 지방의 경우에. 서울의 금천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과거에 우리가 가족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고 행정방식도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중요한, 주효한 시책으로 함께 지원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해서 스마트워크 만든다 이것은 부분적인 일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 가는 역할을 사실은 저는 행정자치부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보건소 같은 데는 그런 팀을 만들어도 충분하고요. 과대 읍이나 동 같은 데, 면은 사실 저출산 문제가 쉽지 않고 그런 데를 조직을 새로 신규는 아니더라도, 자체 조정해서라도 이런 팀들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 주고요.

이 저출산·고령화 가지고 얼마든지 시·군에 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로 삼을 수 있고 시책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고용노동부 차관님 나오셨는데 혹시 대학생들하고 취업 문제나 이런 걸로 직접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많이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이명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해 봤는데 정말 정부가 맨날 청년일자리, 청년고용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대학생들의 외침이나 얘기를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바생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알바하는 데 거의가 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거지요.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고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 안 쓴다. 다른 학생 쓰겠다' 이래서 못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휴식시간 여기에 대해 우리 다 지침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저출산·고령화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 보세요. 물론 지방에 지청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몇 번 가졌는데 젊은이들이 뭘 요구하고 우리한테 뭘 바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보고하고 '뭐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돈은 얼마 투자합니다'합니다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장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죽 열거식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고 현장에서 바라는 걸 반영하는 그런 시책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일단 한번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을 만나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살 만하다고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해 달라'.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장차관님들, 간부님들도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입니다, '그래야 아이를 더 낳지요'. 이 말씀 모두에 같이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삶이 팍팍해지고 희망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파업하는 것 바로 그게 저출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3차 계획에서 보육과 출산 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교육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방향만 의미가 있고 아직 정부 전체의 집중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성이 떨어져 있고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이 효과를 좀 더 분명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목표대로 2020년 1.5명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집중성 있는 관리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재부가 예산 전체를 평가하시니까,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도 집중성을 발휘해서 2020년까지 1.5명 출산을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꼭 살펴보기를 강력히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령화 관련인데요, 고령화는 현재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즉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지만 명퇴나 50대부터 이미 직장을 많은 분이 떠나게 된다는 점이고 현재 정년은 60세니까 그것만 따져도 5년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차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해서 65세 연금 도달 연령 이전에 직장에서 떠난 분들에 대한 소득대책을 지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패키지로 한번 죽 점검을 해 보시고 '뭐뭐가 지금 있습니다. 뭐뭐는 강화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적절하냐는 논의가 있고 근로빈곤층이 49%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기초연금을 막연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층 노인에게 한정된, 타깃이 분명화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근로빈곤층이 45%다 그러면 45% 이하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확실히 늘려서 고충을 덜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조금 할 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까지 보면서 화끈하게 지원해서 근로빈곤층 노인에 대한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여러 가지로 굉장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뒀을 경우에 어떤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소득 역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당연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오케이.

차관님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드리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정치권이 정직하게 임해야 될 것 같고 재정당국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령화대책에 관한 한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도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정치권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 짜실 때 기재부에서 각별한 고민을 해 보실 것을 저는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1년에 9개월, 10개월 정도 하면서 20만 원씩 드리는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사업이 20만 원으로 동결된 지가 8년째거든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성식 위원 물가상승률은 둘째 치고 8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정년과 연금 불일치 문제 또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 문제를 감안한다면 내년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최소한 20만 원은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8년의 동결을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령화 대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노인분들께 일자리와 관련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은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수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행 단가 내에서 여러 가지 초과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 확대를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는 6만 명 못 미쳤는데 지금은 한 2배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런 노력은 하는데 단가인상 문제는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지방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재정 여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차관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동결하실 겁니까? 이건 정책의 합리성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따질 때 확실히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고용노동부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제일 잘하는 것 하나 들라면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입니다. 정말 이 제도는 여야를 떠나서 박수를 보내야 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대기업·공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까?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부가 일정하게 돈을 지원해서 한 1200만 원 든 통장은 쥘 수 있게 만들겠다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복잡한 많은 소소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청년들이 조금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도 이번에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한곳에 일단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그만하시지요.

(웃음)

1분 더 드리세요.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오전에 꼭 하셔야 된다 이러셔서……

○김성식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을 했는데 한번 또 제동을 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만 명밖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일단 올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게 잘못 운용되면 선발식처럼 돼요. 그러면 이 제도가 왜곡된다는 것은 차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재정도 전문가이신데?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올해 청년인턴제 안에서 일단 1만 명을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재부차관님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제대로 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집중성 있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가 발의한 제도입니다. 저는 야당이지만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확대되고 집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우리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넓히는 것 내놓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데 첫발을, 희망의 첫 계단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행자부장관께 하나 물어볼까요.

어느 장관이 취임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러면 지시를 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박병석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실행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몇 년 후에 나타나요, 장관 취임에서부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보통 입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법을 만들고 예산 세우고 하면 한 2~3년, 빨라도 2~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2~3년 걸려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나 뜻 있는 분들이 존립 기반의 문제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투입한 예산·노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 임기 동안에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도 차기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볼지 차차기 대통령이 볼지 모르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권을 뛰어넘는 범국가적 과제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초당적, 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개선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초정권적 과제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이고요.

그런 문제는, 남북 문제하고 바로 저출산의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담보가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한 제도를 바로 우리 공직자나 정치권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따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차관들께 묻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컨트롤타워의 문제예요. 정부가 각 부처를, 계획을 세우는데 어제 관계부처 장관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자신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핵심 과제가 아니다 또는 내 임기 동안에 이 문제가 설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잠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면 청와대에 전담 수석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말 국무총리실에 차장 하나를 더 신설해서 전담 차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지적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처도 '우리 소관 부처에서 이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것을 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된다, 각 부처 모두가 전담 국이 있든지 과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광역단체까지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뭐 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각 부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없어요. 임대주택 지으면서 저출산 문제 조금 해서 청년 좀 주고 이런 부가가치 또는 곁가지의 문제로 생각하지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핵심과제라는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죽 보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하려면 애 많이 낳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비혼이나 만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 자녀에 대한 정책보다는 두 자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민정책이 되겠지요. 정말 내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적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불과 15년 후에는 우리가 인구의 하강곡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산, 2자녀 정책이 안 된다면 이민정책하고 어떻게 결부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 문제지요. 통일되면 인구절벽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을 뛰어넘는 연속성을 갖는 기구와 시스템의 정립 문제 그리고 컨트롤타워, 청와대 수석이든 전담 부처든 각 지자체든 각 정부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최상목 차관 밝혀 주시고요, 행자부차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권을 뛰어넘어서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버넌스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문제 인식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담 부서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부 안에 미래사회경제전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목은 '저출산·고령화'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중에서 그 조직, 국 안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 자체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시키겠습니다.

의식 개혁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민정책 관련된 것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저희가 이민정책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공론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자녀 핵심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세법 개정에 있어서 출생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자부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자부도 이 문제만큼은 정권 차원을 떠나서 연속선상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고 마련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컨트롤타워 부분과 전담 부서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전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전담 부서, 특히 지방에 있어서 전담 부서 부분은 저도 미처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번 특위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남이라든가 광역 같은 데는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병석 선배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의 저출산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민정책의 어떤 고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출산 문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박병석 선배 위원님이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보고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차관님들도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지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할 사람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라고. 저도 답변할 사람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기가 참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특위를 처음에 들어오면서 느낀 제 소회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짜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결기구랍니다. 이건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입니까?' 물어보니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이것을 실무 보좌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국무2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 간사님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제가 컨트롤타워입니다'라는 웃지 못할……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장관이 자신이 컨트롤타워인지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마인드 문제이고 정부가 이렇게 백화점적으로 나열된 과제를 집적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 기재부도 멤버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차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기일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정말로 기재부에서도…… 저는 투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투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처가 집중적으로 의논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 그 정책에 대한 집중적 지원 없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게 각 부처별로 그냥 과제, 과제별로 피상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특위가 위원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처럼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컨트롤타워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 실무 부서에 질문을 해서 다시 컨트롤타워에 물어보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 볼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장관님, 1차 기본계획 96개 과제에 20조, 2차 기본계획 95개 과제에 60.5조, 80조입니다. 3차 과제에서 180조를 투자한다라고…… 수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맞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율은 2006년도에 1.13, 09년도에 1.15, 13년도에 1.19, 향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가 논의에 큰 착시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80조, 180조라는 게 중장기적인 부분, 이를테면 평생학습 지원 몇백 억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것은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고용 일자리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3차 효과도 여기에 다 부어서 80조, 180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그러면 기름 쫙 빼고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이 어떤 거냐, 어떤 과제냐 이것을 따져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이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특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부차관님, 이렇게 기름 쫙 빼고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한번 뽑아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제가 혹시 첨언을 한다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출산 문제라는 게 중장기적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맞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가 어려우면, 경기가 아주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 하지 않습니까? 재정 붓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장제원 위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그러면 저출산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 왜 합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공세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가 가지고…… 물론 장기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주거, 복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허구적이냐면요 자, 교육부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사업 191억, 문광부 학교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635억, 문광부 템플스테이 여가문화 지원 1278억,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863억,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223억, 행자부 CCTV 1174억 이것을 깡그리 뭉쳐 가지고 '80조 투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라고 80조, 180조 지원했다, 투자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행자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CCTV가 직접적으로…… 물론 CCTV 있으면 성폭력 예방되고 범죄가 없는 사회, 출산을 많이 하겠지요. 이것을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행자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자보자 하니까요 정말 이것은 말해야 돼요.

자, 고령층 정보교육사업 지원, 저출산대책이랍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증가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 이것을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번, 2번이에요.

그다음에 공직사회 스마트워크 확산,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이지요. 적어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나올 때는……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세요.

○장제원 위원 기름 쫙 빼고 '저희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라고, 이런 것 필요 없고 한 장을 갖고 와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

실 때 인센티브 준다 그랬지요. 인센티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대충 인센티브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2.3억이요? 한 지방에, 그러면 한 지자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지자체에서 출산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을 만들어서 샘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를 만들어 보든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차 계획부터는 재정지출에 대한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정지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결국 특위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에 법령 개선이라든지 구조개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름을 빼서 재정지출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지만 또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구조개혁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기준 부분은 장단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계부처가 앞으로 특위 운영 과정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 행자부가 가진 것은 현재 특별교부세밖에 없기 때문에 마중물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또 일반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수요 쪽에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최대한 내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종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직장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원인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종합적인 정책의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제원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부처에서 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하면 조금 전에 CCTV를 예로 드셨지만 뭉뚱그려서 '이만큼 투입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장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업무보고 말고 한 장으로 부처에서 뭘 정말 중점 추진하는지,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 110조, 198조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 예산의 구체적 내역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 한번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각 부처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고 가져오신 것들 전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복지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나 기존에 죽 해 오시던 것을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추는, 그것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본인 부처가 컨트롤타워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구조로 따지면 결국 보건복지부가 하는 업무는 '간사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간사님이나 저나…… 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결국은 간사 부처가 하나 있는 건데 그 간사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결국은 모으거나 사실상의 그러한 실무적인 지원인 거지 그게 컨트롤타워로서 전체적인 부처의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고 그것을 저출산과 고

령화라는 관점에서 묶어 내거나 또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세 부처의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부처의 장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이렇게 모아온 정책들의 구체적인 사실적인 문제, 그런 팩트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각 부처마다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게 된 고위험 요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 부처에서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들 내지는 정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저출산 현상을 강화시킨 위험요인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한 5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정을 가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지만 한 80년대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요, 여성 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다른 부처 분들도 아마 그런 식의 관점으로 점검을 해 보시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축소시키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건 결국 노동이 안정적으로, 본인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말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방향 자체는 저출산 현상을 마구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6470원으로 결정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새로운 여론조사 단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인 두 명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7466원이랍니다, 한 명을 낳는 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 그리고 프랑스는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 두 명이 아이 두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8733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 부처가 마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대책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 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는 건지, 완화시키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기재부도, 제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뭐 이해됩니다, 모든 살림을 맡아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각 부처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마다 예산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 기재부의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으나 저는 중요한 사업들은, 적어도 저출산·고령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한결같이 높이신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방식은 결국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당장……

1분만 주시겠어요?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세요.

○진선미 위원 아이들을 당장 키우려면 결국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고용정책은 계속 야근은 죽어라 늘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근에 치이고,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

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방식이라는 게 저는 계속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일자리를 양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고용 불안정도 이렇게 불안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보육정책도 마찬가지지요. 끊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 가고 있고,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해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주섬주섬 모아서 정책 만든다고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개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정적인,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또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단지 다른 것은 수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동개혁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노동시장이 활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고용도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일자리의 질도 더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많은 OECD에서의 연구 결과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도 노동개혁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었지만 하다 하다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개혁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많은 나라들이 도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추가 답변할 차관 계신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됐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오전 질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오전에 인천의 고용복지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시고 오후 3시에 또 국무회의 의결이 있는데 일부러 잠깐 저희 특위에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행자부장관 오셨으니까, 아까 차관께서 인사말씀은 길게 하셨습니다. 혹시 인사말씀 주실 것 있으면 잠깐 인사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에서 광역형으로는 국내 최초인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추경과 관련한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행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석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석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회의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는 윤종필 위원님이십니다.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10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어차피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차관님, 작금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이삼십 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출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주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복지부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투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재부도 거기 간사 못지않게 복지부와 함께 컨트롤타워라 그럴까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제가 어제도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1·2차 기본계획에서 별 성과가 없다면 3차는 제대로 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정량조사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성조사를 같이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심층적인 심리 상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저출산 예산에 200조 이상이 투입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의 저출산 관련 사업들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바꾸는 근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2016년 저출산기본계획에 따르면 10개 부처에서 대표적으로 5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출산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도 없는 사업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재부에서는 저출산사업들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 타워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겠고 또 아까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 저희가 심층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피드백이 돼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알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이런 국가 비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윤종필 위원 우선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나 실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각고해 주시고, 저출산 정책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우수사례들은 적극 발굴해서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물론 국내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 들어 보셨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들어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 책에 소개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지자체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일본 전문가들의 이 연구 결과를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그 교훈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손발을 정말 잘 맞춰 가지고 노력하면 분명히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또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같이 손 맞춰 하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세요.

○윤종필 위원 휴직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참여자 중에 남성이 5.6%로 미미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조직문화나 이런 것을 좀 바꿔 가면서 육아휴직을 쓰기 쉽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CEO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적극적인 혁신 요구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현장 노동자 출신 새누리당 비례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죽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한 2년 계시다가 또 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지고 국회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쪽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이 편안해야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뿐만 아니고 여성 임신·출산과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임이자 위원 일단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지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케어해 주는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성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관련돼 가지고 급여가 지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임이자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700억 정도 전출금, 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연간 700억이……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를 고용보험에서 보충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고용보험 자체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산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일반회계 전출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저께 제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우리가 모든 여성들에게 똑같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쪽에서 좀 받아서 해 볼 생각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모든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출산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보험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아마 혜택을 더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 기재부차관님,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700억 정도만 고용노동부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실업 관련돼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조선·해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차후에도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쪽에서 또한 대량 실업자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지고는, 이제는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담하는 것은 2001년도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해서 그때 합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 부분은 2001년도에 그런 결의를 했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98조를 쏟아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냥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출산율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여성들이 좀 편안하고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했을 때 좀 편안한 사회가 되고 이랬을 때 애도 낳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모든 여성들이 수혜자가 돼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임이자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는 고용노동부도 일이 많아요.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령화 일자리까지 굉장히 일이 많은데 여성가족부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보건복지부도 일이 많아서 뭐 되겠어요, 그것? 어저께 보니까 할 의지도 별로 없던데.

그래서 향후에는 기재부차관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가 2016년부터는 심층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받

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고 체감이 큰 쪽으로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합계출산율을 분석해 보면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뭐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실패라고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나라, 두 부류를 봤을 때 우리 차관님이 보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공한 나라가 아닌 이유는 저희가 문제인식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보기로는 성공한 나라들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을 해 준다, 그다음에 실패한 나라들은 각자에 맡긴다, 그런 관점에서 성공한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1.8 이상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독일, 일본, 뭐 1.4 정도 됩니다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주로 부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성공한 나라들의 출산대책, 젊은이의 이런 대책 관련해서 GDP의 몇 % 정도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중 위원 우리는 몇 % 정도 쓰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우리는 전체가 80조니까 GDP의 한 1%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성공한 나라들은 거의 3% 이상을 쓰고 있고 우리는 1%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전체가 다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건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공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발전단계에서, 저출산 문제를 받았을 때 선진국으로 어느 정도 그 성숙된 사회의 발전단계랑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저출산 충격을 받은 게 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뒤에 경험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성중 위원 저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에 맡겨서 될 사안은 아니고 전체로 보면 지금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은 부처별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죽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컨트롤타워에서, 대한민국 진짜 주요 현안의 차원에서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로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고 싶은…… 뭐 전체적으로 묻는 것은 좀 현안을 넘은 사항이고 차관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실무 책임자 선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그런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되는 우리나라 전체 각종 출생 관련, 저출산 관련 대책들이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것을 재탕이나 다시 반복하는 이런 차원이고 특별한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콘셉트라든지 개념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각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를 많이 냅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 주택에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지원하는 주택이 3만 채입니다. 우리가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기껏해야 10%도 혜택이 갈까 말까입니다. 그렇지요, 신혼부부한테 준다니까?

저는 이걸 관점을 달리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두 번째, 우리가 젊은 청년들한테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전체 무슨 취업이니 일자리니 뭐 이야기는 신나게 하는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2명 낳으면 군대 면제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게 만들자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용 관련해서 지하철, 버스,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이런 관련해서도 아이를 많이…… 불란서라든지 유럽국가에서는 아이 3명 이상이면 전부 40%, 50% 면제예요. 그런 어떤 것을 주는, 페이버(favor)를 주는 형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우리 주택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주택도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한테 그 큰 혜택을, 채용 순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도 충분히 그런 비율, 우리가 지금 취업이 예전같이 한 직장 들어가면 평생직장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옮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데 이런 데도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한테 더 우선을 주자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육아와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거의 책임지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벗어나면 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쪽에 주어야 된다,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시간이 다 가니까 내가 물을 수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취업 취업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젊은이들한테 특단적인 취업대책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까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

○박성중 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한다고 얼마나, 몇 푼이나 간다고 그게 취업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일단 중소기업에 한 2년 정도 근속하게 되면 2년 후에는 한 12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정말 우리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책상에서 레드 테이프로 하는 것은 정말, 뭐 부분부분으로 나아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지금 말씀하신 대책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서초에서 구청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에 가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에 빈 시설이 많습니다. 구글이라든지 각종 IT 업체들, 지금 세계적인 업체들, 그 업체들의 첫 출발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같이 번듯한 사무실에서 출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창고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돈이 안 들고 실패해도 금방 일어설 수,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실패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지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간을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거의 공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세만 조금 더……

○위원장 나경원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더 마무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그래서 마무리 간단히 한다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

습니다. 실제 공무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자기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 좋은 머리를…… 시설, 공간 제공하고, 한번 실패해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저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각 지자체에서 일단 제공하기 시작하면, 정부까지 제공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 나경원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입니다.

어제도 교육부·보건복지부·여가부·국토부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는데 최 차관님, '결론은 다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기재부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저출산·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구 문제는 또 시장의 문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유연한 가족관, 포용적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 문제까지도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큽니다. 특히 이런 저출산·노령화 문제, 복지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견해차도 많고요. 또 중앙의 생각이 생색만 내고, 지방은 그냥 곰이 재주 부리듯이 고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면 아직도 지방은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 중앙과 지방의 예산 비중을 보면 세입은 55.7 대 44.3인데, 세출 측면에 보면 중앙 42.5이고 지방이 57.5나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은, 지출이 많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올해는 한 10% 정도 지방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계속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운용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잡는 데 작년 예산에 조금 보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나가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조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 수입과 지방 수입 간에는 한 7 대 3 정도 됩니다마는, 아까 세출이 지방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까지 지방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재원으로 치면 한 35 대 6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어차피 2013년 이후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어지니까 재원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이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같이하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면서도 지방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재부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이고 어떤 면에는 노령화 문제가 산업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고령친화산업이 33조 정도 된다면 2020년에는 125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ICT 결합형 웰니스케어산업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이런 것들을 의료와 접목시켜서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좀 열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해 가지고요, 지금 그 부분에 기술개발 예산을 연간 한 400억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정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집중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사실 만성질환자 수가 10% 감소하면 우리 재정이 1조 원가량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써 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홍의락 위원 행자부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소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시골로 가면 없고 또 없다 보니까 의사에게 주는 봉급은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에 비해 가지고 2배.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독거노인들이 시골로 가면, 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가면 집배원들이 1만 8000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부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러다 보면 계속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고시키는 경우 많은데, 행자부에서 이 인원을 서로 부처 간에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집배원들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노인이 어디가 편찮으신지 뭐 이런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노령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우정본부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MOU를 했고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집배원들이 우편 배달하시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을……

○홍의락 위원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해고시키지 않고 그 인원 1만 8000명을 복지 제고를 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현실 적응시키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듯한 내용들이 정말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용노동부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45세 이상의 퇴직예정자나 구직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재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시킬 수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계속 그 수준에 멈추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전반적으로 저희 연령별로 스킬 레벨을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요. OECD에서 나온 PIAAC이라는 걸 보면 저희 중·장년층이 좀 학력이 낮고 스킬 레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일자리센터 나가서 알아보면 취업시키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 쪽에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43분)

○위원장 나경원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간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나경원 의사일정 제2항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및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특위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위원 구성 및 규모 등 자문위원 선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자치부

다. 고용노동부

(14시44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전경련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또 청년 실업률이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부터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2060년에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접어드는데 정작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실업에 빠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고용이 가장 중요한 복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복지에 신경 쓰는 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간 152조 원의 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관님께서는 152조 원을 투입한 이 정책의 효과가 사실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는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특히 저출산 관련된 재정사업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매년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런 상태에서 5년간 또 197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 되지 않게끔 좀 더 신중하게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정된 재원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가 어디인지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재원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또 위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떤 당파도 또 정부도 다 뛰어넘는, 어쩌면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의 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에서만 일을 하면 안 된다,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쥐고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19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부총리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인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2016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의 문제 인식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곳에 외국인 인력 활용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구체화는 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찬대 위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고, 저출산대책으로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재도 지키지 못하면서 외국 인재를 이민시켜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가능한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한 있습니다.

외국의 인종 갈등, 테러 때문에 많은 국민이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러한 이민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생산가능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에 이민정책 이게 가장 주된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다문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나라의 어떤 사회통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장점을 취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좀 치유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판단과,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효율적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찬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또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저임금을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들과 더 낮은 인건비 때문에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단기적인 처방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해결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만 청년 일자리 사업 19개에 1조 26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개 사업 중에서 3개가 폐지되고 1개가 다른 사업과 통합됐습니다. 1년 만에 기존 사업의 20%가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당초에 6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단 13명만 지급을 받았거든요. 지금 차관께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효율성 있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워낙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고 그 과정에

서 새로운 사업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그 상생고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장년들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지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실제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워낙 시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박찬대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폐지·통합과 집행 실적 부진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 없이 실적 내기용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가, 사실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인턴 사업만 하더라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경원 예.

○박찬대 위원 청년인턴 사업만 하더라도 노동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큼직한 청년인턴 사업만 보더라도 국토부는 항공인턴제, 중소기업청은 창업인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 청년인턴 프로그램과 해외지역 기구 파견 인턴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채용형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청년인턴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처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쪼개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제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느 부처에 가야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우리 정부에서 많이 쓰는 맞춤형 그 인턴제를 할 수 있는 확인조차 사실 힘들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한 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든지 아니면 부처별로 정보공개와 접수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출산 그다음 고령화사회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통합되어 있는 컨트롤타워와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위원장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하다, 또 제도도 부족하다 또 재원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우리 장제원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CCTV예산 같은 것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각 부처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예산을 다 모아서 '우리 이만큼 투입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겉모양만 갖추는 이러한 저출산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1억총활약상'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정책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가고 또 그 정책을 좀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차관 또 기재부차관 생각이 어떠신지요?

간단히들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나름대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또 복지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마는 여러 부처에 갈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미비한 기능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기재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특위에서 논의를 모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기구나 컨트롤타워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만이 아주 효율적인 대책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말이나 포장만 되어 있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공유되고 있느냐, 무조건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것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든지 또는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민족주의적인, 민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만 우리가 기댈 수 없다, 결국 어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공유해야 되고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또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제 쉬는 시간에, 점심 오찬 시간에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아이 적게 낳으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라고 그랬던가요, 그 슬로건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이를 많이 낳자는 슬로건도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주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업무부처인, 주무부처인 복지부라든지 여가부에 이와 관련된 홍보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우리 고용노동부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일정 부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시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80년대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둘만 낳자라는 운동을 했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과연 우리한테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사실 조금, 여기 오늘 적정인구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처가 없기는 하지만 모든 부처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다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도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차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도요.

○위원장 나경원 보충질의시간은 4분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이것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점유비율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채권에 점유하는 비율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대체투자라든지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익성과, 왜냐하면 한편으로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말이에요 지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는 대기업만 46개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2043년에 국민연금 누적액수를 2500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요, 시나리오에? 그런데 그때부터는 현금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금을 내주려면, 현금화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갖고 있는 채권과 주식을 팔아야,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물량의 규모가 이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대로 포트폴리오가 지속되고 그 무렵부터 시장에 그 물량을 내놓는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민연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것은 한 10년 이전부터 그 고민을 계속해 왔고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 금융투자 부문을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광온 위원 다변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고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광온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시지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상 이게 수익성이 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 손해를 부담하든 재정이 부담하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해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광온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수익률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사 어느 쪽이 그 부담을 안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는 어떤 대원칙이 선다면 이 문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어떻든 간에 국가 전체적인 국가채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손해를 안 본다면, 손해를 봐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면 국가재정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배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라는 동의, 공감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홍의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나도 바꿔 줬어요.

○위원장 나경원 박병석 위원님도 양보해 주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오전에 총론적인 것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 경기도에서 하는 고령화대책 사업 중에서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때 했던 사업입니다.

○김학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이유 아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고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골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현재로서는 요양병원 같은 데 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 가시는 것보다 사시는 동네에서 친구분들이랑 여생을 마무리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이디어를 잘 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숙박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 안 돼서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또 인력기준이 뒷받침을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것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한번 이것 참고 좀 해 주셔 가지고서 제 사무실로 별도로 타당성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초산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30.97세인데, 그러니까 31살 정도에 결혼해 가지고 아기 하나 낳으면 사실 더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만혼을 갖다가 좀 일찍 결혼, 결혼적령기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저거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라고 그래 가지고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 기재부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학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828억 원이 들어가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1000억을 얼마 안 있으면 돌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신생아가 많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다가 24시간 아이돌봄케어센터를 지어 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꼭 특별한 사람보다도 65세 이상 된 분 중에서 과거에 어린이집에 종사하신 어머니나 이런 분들, 자격증 가지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거기서 고용하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경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지역에, 적당한 지역에 받아 가지고 그런 데를 아이돌봄센터로 바꿔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행기 여승무원들 스튜어디스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에는 수천 명의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갈 때마다 시댁에다가 맡기고 또 사람 써서 맡기고 하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여승무원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서 거기 24시간 돌봄센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4시간 돌봄센터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맡겼다가 외국 일정 마치고 들어오면서 자기 꼬맹이 데리고 집에 가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아마 비행기 여승무원들도 아기 낳는 것에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맞벌이 가구가 한 250만 가구 되는데 결국은 정부의 어떤 이런 공공……

○김학용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10년 합계출산율을 보니까 전업주부는 2.2명인데 소위 취업여성 직장맘들은요 공공기관이 1.25명, 일반 기업이 0.72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민간 돌봄시장이…… 어차피 전체가 250만 가구기 때문에 공공으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공공부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민간 돌봄시장의 질 관리를 높이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우리 고용노동부차관님한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홍의락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고령자 적합업종 직종이 한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47개고 민간부문이 83개인데 굉장히 단순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노동부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1개소, 고령자인재은행이 49개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취업지원센터 19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부처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하면 수혜자들의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노령인구를 직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홍의락 위원 그리고 기재부차관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재원 배분이요, 굉장히 사람 머릿수로만 배분을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요양기관이나, 학교마저도 학급 수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 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비용은 줄어들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정하는 방법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일단은 아마 그게 특히 교육재정 관련돼서 이슈가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곳곳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오늘 고민해 보면 노인 문제는 건강 문제하고 출산 문제하고 또 인구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최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우선 뭔가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 투자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 쓰는 걸 갖다가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건강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환이 안 되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장기프로젝트로 효과도 안 나타나니까 우선 돈을, 이건 또 적게 드는 돈도 아니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서……

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 계속 미뤄 왔지 않습니까? 2005년도인가 그때 조금 관심을 쓰기 시작했고, 미뤄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절벽에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계획도, 저희 중기재정계획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웰니스 케어 문제나 출산 문제도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만 뭔가 찾아서 시장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의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홍의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께 묻겠습니다.

통계의 허구, 실적의 허구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년 취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의무고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석 위원 예.

지금 고용보험이 되는 게 취업 몇 개월 이상 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까, 실업보험?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실업급여는 180일 중에……

○박병석 위원 6개월 이상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6개월 이상 해야 실업보험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어디 갔을 때 경력 증명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박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몇 개월 인턴 채용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가 청년인턴은 3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3개월 하고 정리하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가 정규직 전환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인턴 기간 3개월 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기관에서, 산하기관에서 과거에는 청년인턴을 10개월을 했어요, 10개월. 10개월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만약 정식 채용이 안 되면 실업보험도 받을 수 있고 어디 갔을 때 경력이, 자기 스펙도 되는 것이고 또 10개월 정도는 해야 자기도 도움이 되고 해당 기관에도 도움이 되는데 작년에 보면 반으로 줄여요, 5개월.

그러면 5개월 인턴 해 봐야 경력도 안 되고 실업보험도 안 되고 그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대신 청년인턴은 2배로 뽑은 겁니다. 정부의 실적에는 2배가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게 통계의 허구, 실적의 허구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것 지적을 해서 아마 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지, 가령 단순하게 인턴 몇 명 채용했다…… 그러면 자꾸 그런 게 생긴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유심히 봐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업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아마 공공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박병석 위원 예,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모든 기관은 5개월로 줄였어요, 그전까지는 10개월 하다가. 그래 놓고 발표는 '우리 청년인턴 2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숫자는 확 늘어나지요. 그러나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역행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박병석 위원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데 지금 입사시험 같은 데 보면 부모에 대한 직업, 학력, 재산을 적게 돼 있어요. 이것 왜 적어야 됩니까?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취직시험에 본인의 것만 적지 부모의 직업, 학력, 재산, 직책 이런 것 일체 쓰지 못하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맞습니다.

○박병석 위원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공공기관에서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넣으시지요.

○박병석 위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각 대기업이나 관계기관에 소위 부모 스펙 기재 방지를 해 달라는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러한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모든 취직시험에 본인의 것만 기재하지 부모의 직업, 직책, 학력, 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는 법을. 이미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이니까 환노위에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고용노동부차관께 유연근무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보면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보육정책이고 또 보육지원 확대고, 두 번째가 유연근무제 확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36.2%가 유연근로제 확산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유연근로제 확산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실 것이고, 지금 올해 4월부터 승인된 개수가 30개소이고 204명을 승인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00명 이상 사업장에 5%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원금액도 1인당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줘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 그 유연근무제를 포함해서 근무 형태를 다변화하는 것은 지금 관행과 연관된 거라서 쉽게 현장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빠른 속도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캠페인도 벌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의회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주요 경제단체와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그게 그냥 관행이라고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탄력근무제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고 우리가 벌칙 규정을 덜렁 둘 수 없는 것이 벌칙 규정을 두면 여성을 안 뽑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력근무제나 재량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를 했을 때 지원금액 30만 원 주고 근로자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탄력근무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을 테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뭐 자발적인 관행이나 캠페인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재정 지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행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사례도 많이 발굴을 하고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유연근무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일가양득 지원'인가 뭐 이렇게 이것 이름을 붙이셨나요? 이것만으로는 확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전혀 이것을 실

시하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지원 이상의 어떠한 정책으로 가능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 나경원 서면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이명수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계십니다. 더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출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미혁	김광수	김성식	김학용
나경원	박광온	박병석	박성중
박찬대	윤종필	이명수	인재근
임이자	장제원	진선미	최교일
홍의락			

○청가 위원(1인)

금태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이상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차관보	이찬우
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정책기획관	김형수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차관	김성렬
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지방행정정책관	정현민
지방재정정책관	김석진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국제협력관	정민오